

#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혁신거점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93억 등 총 156억 투입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 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하는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 사업에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선정됐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도는 7월 전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의 농생명산업과 혁신지원인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혁신거점 구축 사업을 기획했다.

본 사업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93억 등 총 156억원(국비 93, 도비 20, 시군비 20,

민자 23)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여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농기계, 로봇, ICT) 시제품·디자인 제작 지원, 기술 멘토링 및 제품 고도화 지원 등에 도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기술상용화 중장기 선도 R&D과제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 성장에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기업 등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총괄하고 전북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 미디어더바이스, 이젠365가 공동

으로 참여한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OpenLAB을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시제품 검인증 등 지원에 참여한다.

서우엠에스, 미디어더바이스, 한국농수산대학은 클라우드기반 정밀농업인공지능 플랫폼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메타로보틱스, 이젠365, 국립축산과학원은 클라우드기반 축산 무인방역 및 관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통해 농생명의 수도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4차산업과 농생명산업을 융복합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도내 관련기업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잇선 향한다

검찰, '협력사-원청-모회사' 수순 잇선 수사  
모회사 노무담당 전무 구속... "피의 사실 소명"  
그린화 작업 총괄 삼성 서비스 임원도 기소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을 처음 구속하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잇선'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다음 수사 타깃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목장군(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목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고삐를 풀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구속 영장 기각으로 한동안 수사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특히 전날 영장 발부 이유에는 목시 위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혐의에 관해 일정 수준 이상 소명했는데, 목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해야 할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목시는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을 오가면서 노무를 전담해온 인물이다. 2011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로 시작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잇선'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다음 수사 타깃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 활동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목시 구속으로 모회사의 개입까지 일정 부분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목시 '잇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르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상급자가 함께 공모를 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관계로 본다. 이 이론대로 '협력업체-원청-모회사' 연결 고리가 이어지면 삼성그룹 임원에게도 노동조합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잇선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앞서가지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지난달 10일 압

수수책 대상에 포함됐던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측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이 다음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노동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목시가 입사할 때부터 반노조 생각을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려고 회사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시에 따라 총괄실행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노동사건이라고 해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7일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체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전했다.

그는 민생경제TF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쟁점이 많거나 제정안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해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간단한 것은 TF에서 한다"고 했다. /뉴스1

### "임태훈 소장 흠집내기는 기무사 문건 몰타기"

군인권센터 "가짜뉴스 만든 TV조선 등 언론중재위 제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임태훈(42) 센터 소장에 대한 일부 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이른바 '군국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기무사의 폐단과 계엄령 등을 통한 친위 쿠데타 계획을 폭로한 이후 자유한국당과 TV조선 등 일부 언론사는 소설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해 센터와 임 소장을 흠집내고 있다"며 "저널리즘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TV조선·채널A·중앙일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센터는 임 소장과 관련된 두 가지 보도를 언급하며 "모두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임 소장이 마린은 순직자 조문 현장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밀착 수행하며 유족들에게서 송 장관을 얻었다'는 내용의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임 소장의 언급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이 인사복지실장을 문책하는 등 임 소장이 사실상 송 장관을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다.

이에 대해 센터는 "유족들에게 유가족을 대신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대리인으로 승인 받아 사 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단 구성, 장례 진행 등을 위한 합의를 중재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는 시민단체(NGO)의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감시·견제·비판·협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과 중재는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몰타기라고 비판하고 "발생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유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가짜뉴스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해병과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현재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기사와 관련해서 "임 소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당 추천 위원도 동참한 정상적인 위원회 소집 요구를 마치 임 소장이 국방부장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원클레 군수처부를 집합시킨 것처럼 묘사하며 위위직을 해촉하라 주장하고 있고, TV조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